

# 일본 가톨릭교회의 전후 역사인식 : 정의평화협회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이선이\*\*

- I. 시작하며
- II. 전시 일본 가톨릭교회의 역사인식과 반성
- III. 정의 평화협회의 메시지를 통해서 본 전후 역사인식
  - 1. 역사교과서 문제
  - 2. 외국인 등록법, 지문날인 문제
  - 3. 야스쿠니 신사 문제
  - 4. 일본군 '위안부' 문제
- IV. 나가며

##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일본 교회의 전후 역사인식에 대해서 정평협이 낸 성명서를 네 가지의 역사적 사안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역사교과서 문제 둘째, 외국인 등록법과 지문날인 문제 셋째, 야스쿠니 신사문제, 넷째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이다. 정평협은 일본의 우익의 우편향된 역사교과서는 동아시아의 공통의 역사인식과 거리가 먼 것으로 젊은이들이 아시아 사람들과 관계 맺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안을 가르

\*이 글은 2021년 동아시아복음화연구원의 연구지원으로 이루어졌다.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치지 않는 것이라고 우려한다. 또한 모든 인간은 하느님의 자녀로 평등하며 소중하기 때문에 어떠한 인간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교회의 입장에서 일본의 지문날인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전시 천황제 군국주의의 정신적 지주'였던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수상의 공식적 참배 강행은 '60년 전의 전쟁을 긍정'하고 '나라를 위하여' 죽는 것을 미화하는 일이라고 비판한다. 마지막으로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본질적으로 국가가 인정한 강간과 노예화'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입장의 논평을 내었다. 이러한 입장 표명은 모든 그리스도교도는 사람들과 사회가 내면에서 변할 수 있도록 일하는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주제어:

일본 가톨릭교회, 일본가톨릭 정의와 평화협의회, 전쟁책임, 역사인식, 역사교과서, 지문날인제도, 외국인 등록법, 야스쿠니신사, 일본군 '위안부'

## I. 시작하며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967년 3월 교황 바오로 6세는 회칙 「민족들의 발전(POPULORUM PROGRESSIO)」 서론의 ‘정의와 평화’ 부분에서 “교회 중앙 행정 기구에 교황 직속 위원회를 두기로 하였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알린다.

이 위원회의(정의와 평화 위원회-필자) 목적은 “하느님의 백성에게 오늘날 그들의 사명에 대한 완전한 인식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들은 가난한 국가와 국제 사회 정의의 발전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저개발국이 자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sup>1)</sup>

교황청은 ‘정의와 평화위원회’를 설립하여 “빈곤, 억압, 차별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빼앗긴 이들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전 세계 주교협의회에 같은 취지의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호소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일본에서 1970년 ‘정의와 평화주교위원회’가 발족하였다. 정의와 평화주교위원회와 병행하여 신자들에 의한 자주적인 활동도 시작되었는데, 1974년 주교들에 의한 위원회와 합해져 오늘날의 ‘일본가톨릭 정의와 평화협의회(이하 정평협으로 약칭)’가 되었다. 정평협은 주로 1. 비폭력 평화·평화헌법 9조를 지키는 일, 2. 탈원전, 3. 사형제폐지, 4. 오키나와에서의 인권침해문제 5. 전세계의 평화를 위한 국제연대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 정평협은 탄생 직후 1970년 1월 1일 일

---

1) POPULORUM PROGRESSIO : ENCYCLICAL OF POPE PAUL VI ON THE DEVELOPMENT OF PEOPLES  
[https://www.vatican.va/content/paul-vi/en/encyclicals/documents/hf\\_p-vi\\_enc\\_26031967\\_populorum.htm](https://www.vatican.va/content/paul-vi/en/encyclicals/documents/hf_p-vi_enc_26031967_populorum.htm)(검색일 20220520)

본주교단과 함께 「현대에 평화를」<sup>2)</sup>이라는 성명을 발표한다. 이 성명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의 머리말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 슬픔과 고뇌, 현대인들 특히 가난하고 고통 받는 모든 사람의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제자들의 기쁨과 희망이며 슬픔과 고뇌이다<sup>3)</sup>”를 인용하면서 시작한다. 그로부터 2021년 12월까지 일본가톨릭 정의와 평화협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것만으로 함께 119개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는 환경탈핵·역사인식·전쟁책임·교과서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본 논문의 주제인 전후 역사인식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은 한국 민주화·한일관계, 지문날인·체류외국인문제, 역사인식·전쟁책임·교과서 관련 성명이다. 정평협의 성명서들은 일본 사회 내부에 대한 다양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대체로 현재 일본 사회문제에 대한 기원을 전전 일본제국주의가 걸었던 길, 즉 과거사에서 찾는다. 그리고 그에 대한 현재의 극복이 일본사회의 미래를 열 수 있다고 전망하는 경향을 띤다.

본 논문은 일본 천주교회의 전후 역사인식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정평협의 성명서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일본 천주교회의 전후 역사인식에 대한 연구로는 미요시 치하루(三好千春)의 글이 있다<sup>4)</sup>. 이 글은 전전 일본가톨릭교회와 3.1운동부터 전후 한일주교교류회까지 일본 가톨릭교회의 역사인식의 일련의 흐름을 다루고 있다. 본 논문의 주제인 정평협에 대해서도 한 절을 할애하여 논하고 있다. 그런데, 주로 한국민주화 운동

2) 日本司教団・正義と平和委員会, 「現代に平和を」, 1970.1.1.

<https://www.jccjp.org/archives/info/1264.html>(검색일 20221213)

이하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성명서의 출처는 일본 정의와 평화협의회 공식사이트의 자료실 [https://www.jccjp.org/?post\\_type=info](https://www.jccjp.org/?post_type=info)이다(검색일20211221).

3)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2010(1969), 209쪽.

4) 三好千春, 「日本カトリック教会の歴史認識-記憶の連帯を目指して」, 『신학과 철학』 36, 2020.6.5

과의 관계 그리고 한일주교교류회와의 관련 속에서 논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가톨릭교회의 역사인식에 대한 심층적 이해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치노부 이치로(光延一郎)는 정평협이 한국문제에 관여한 배경에 대하여 논하고 있으나 역사인식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sup>5)</sup>. 본 글은 정평협의 성명서와 일본가톨릭주교협의회 사회사목위원회가 발행한 『왜 교회는 사회문제에 관계하는가 Q&A』<sup>6)</sup>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정평협을 중심으로 일본천주교회의 역사인식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정평협의 성명서는 역사 일반부터, 야스쿠니신사, 교과서문제, 상용한자, 지문날인 등 재일조선인 문제, 피차별 부락 문제, 천황제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오키나와 문제, 3.1운동 등 다기에 걸쳐있다. 한국의 ‘인권’ 문제에 관해서도 상당한 양의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는데, 한국의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도 과거 일본제국주의 식민지배가 초래한 결과라는 책임의식이 깔려있는 듯 보인다. 본 논문은 일본가톨릭교회와 일본제국의 관계 그리고 전후 역사관련 메시지를 4개의 주제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II. 전시 일본 가톨릭교회의 전쟁책임과 전후 반성

1995년 2월 25일 일본가톨릭주교단은 전후 50년을 맞아 전전 시기에 대해 깊이 있게 돌아본다<sup>7)</sup>. 이 성명서는 일본 가톨릭교회가 1932년 조치(上智)대학 ‘야스쿠니신사 참배 거부사건’ 이후 신사참배를 ‘애국심 표명’

5) 光延一郎, 「東北アジアの和解と日韓カトリック教会の役割」, 『신학과 철학』 36, 2020.6.5.

6) 日本カトリック司教協議会社会司教委員会, 『なぜ教会は社会問題にかかわるのか Q&A』, カトリック中央協議会, 2012.2.15.

7) 日本カトリック司教団, 「平和への決意 戦後50年にあたって」, 1995.2.25.  
<https://www.jccjp.org/archives/info/1326.html>(검색일20211221).

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형제자매에게 강제하였다고 말한다. 일본가톨릭교회는 바로 이 사건을 전쟁협력 시점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신사참배를 받아들이기 이전 1924년 9월 가고시마(鹿兒島)현 아마미 오시마(奄美大島) 중학교 학생 2명이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퇴학당하는 일이 있었다. 또한 1929년 10월 가고시마 오시마 고등여학교에서 식년천궁제(式年遷宮祭)<sup>8)</sup> 기념의식을 하지 않은 일이 교육위원회에서 문제되어 학교가 사과하는 일도 발생하였다<sup>9)</sup>. 당시 일본 그리스도교는 오랜 박해의 시간을 보낸 후 1873년 기리시탄 금지 게시판=고사츠(高札)가 철거되었지만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sup>10)</sup>. 여기에 만주사변 등 일본의 군국주의가 강화 되어 가는 상황에서 쉽지 않은 선택의 기로에 섰을 것이다.

1931년 9월 18일 만주사변이 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932년 5월 5일 조치대학의 배속장교가 학생들을 인솔하여 신사를 참배하였다. 이때 가톨릭 신자 학생 2명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전시관인 유취관(遊就館)만 견학하였다. 이 일이 있은 후 12월에 군부는 조치대학에서 배속장교를 철수시켰으며, 육군대신은 “그리스도교는 일본의 국체와는 물과 기름처럼 서로 어울릴 수가 없으며 그리스도교는 사교(邪敎)이고 신자는 매국노<sup>11)</sup>”라고 비판하였다. 이를 계기로 일본 사회에서는 반그리스도교 정서가 더욱 심각해졌다. 1933년 아마미 오시마에서 군부의 영향 아래 교회와 교인들에게 폭력이 행사되고 캐나다 출신 선교사에게 간첩혐의가 씌어져 캐나다 출신 선교사 전원이 섬을 탈출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사태가 심상치

8) 일정 기간마다 신사 건물을 새롭게 조성하여 옛 신사의 신위를 옮기는 것을 식년천궁이라고 하고 그 행사를 식년천궁제라고 말한다. 이세신궁이 20년마다 행하는 천궁제가 가장 규모가 크고 유명하다.

9) 일본가톨릭중앙협의회 복음선교연구실편(이종승·윤영순 역), 『역사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전시, 일본 가톨릭 교회의 입장과 신사 참배』, 가톨릭출판사, 2000, 43~44, 47~48쪽.

10) 고노이 다카시(이원순역), 『일본 그리스도교사』, 한국교회사연구소, 2008, 422쪽.

11) 일본가톨릭중앙협의회 복음선교연구실편, 같은 책, 56쪽.

않게 전개되자 나가사키 주교 하야사키 히사노 주교는 1935년 2월 23일자로 훈령을 발표한다. 여기서 국체와 천주교(公敎)교리는 모순되지 않으며, 신사참배는 종교적 의의가 없다고 말한다. 나아가 국방헌금과 위문품 모금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천주교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시하였다<sup>12)</sup>.

4월 25일 도쿄 대주교관에서 가톨릭의 포교에 관한 순종교협의회(純宗敎協議會)를 개최하여 「전일본교구장 공동교서」가 나온다. 여기에 당시 일본 가톨릭교회의 어려움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다.

우리 가톨릭교는 예로부터 바르게 가르치고 또 신자들은 그 가르침을 잘 따르고 있지만 시대를 막론하고 오해를 받고 비방당한다는 것은 실로 유감입니다……외국인 선교사는 포교지의 땅에 문힐 각오를 하고서 자기 조국을 떠났고 언어와 풍습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서도 이를 참고 견디며, 신자들의 증가와 포교지 출신의 사제 배출을 위해 노력하며, 그 포교지의 교회가 독립을 할 수 있게 되면 그 나라 출신 사제에 맡기고 포교지를 떠납니다……우리 일본 가톨릭 신자의 애국의 정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써 당국에게 우리들의 애국의 정성이 담겨 있는 비행기를 헌납하고자 합니다.<sup>13)</sup>

이 교서는 주일 로마 교황청 사절 대주교 바오로 마렐라, 도쿄 대주교 알렉시스 삼본 등 13명의 명의로 『일본 가톨릭신문』1935년 5월 12일에 발표되었다. 이 글은 1549년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에 의해 일본에 가톨릭이 전래된 후 ‘기리시탄시대’를 거쳐 도쿠가와 막부시대 계속된 교회와 신자들에 대한 탄압을 상당히 의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12) 「하야사케 큐노스케 주교 훈령」(1935.2.23.), 일본가톨릭중앙협의회 복음선교연구실편, 같은 책, 65쪽.

13) 「全日本教區長 共同敎書」(1935.4.25.), 일본가톨릭중앙협의회 복음선교연구실편, 같은 책, 121~130쪽.

일본 정부는 일본제국 헌법 제1조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통치한다”에 입각하여, 1935년 일본의 국체에 관한 성명서에서 “천손강림(天孫降臨) 때 받았던 신칙(神勅)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만세일계의 천황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다<sup>14)</sup>”라고 밝혔다. 이에 일본 가톨릭은 신사참배가 “애국적 의의를 가지는 것이지, 종교적 의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해주신다면, 저희 가톨릭신자들이 신사 및 초혼사에 참배하는 것이 조금은 손 쉬워진다”<sup>15)</sup>고 문의한다. 이에 대해 “학생들을 신사에 참배시키는 것은 교육상의 이유이며, 이때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경례는 애국심과 충성심의 한 표현 방법”일 뿐이라는 답변을 받는다. 이로써 1936년 교황청은 가톨릭 신자들의 신사참배를 허용한다는 훈령(Pluries instanterque)을 반포하고, 한일 교회의 신사참배와 관련된 논란에 마침표를 찍는다.<sup>16)</sup>

그 후 1937년 7월 7일 루거우차오사건이 일어나면서 중일전쟁이 본격화하고 태평양전쟁으로 전쟁이 확대일로로 치닫는다. 전쟁이 확대되면서 일본의 내무부, 문부성, 군부의 감시와 단속이 강화되고 종교계에도 구체적인 전쟁협력 명령이 하달된다. 1940년 4월에 ‘종교단체법안’이 시행되면서 종교에 대한 통제가 법제화 된다. 전쟁이 확대되면서 전쟁협력에 대한 강한 압력을 받으며 1943년 2월에는 오사카교구의 브스케신부가 불경죄와 패전사상 선전활동 혐의로 헌병대로 끌려간다. 그리고 헌병대 영창에서 고문을 당하고 정신병원으로 이송되어 3월 10일 사망하였다. 헌병과 경찰관의 감시하에서 신부의 사망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없어 비밀리에

14) 일본가톨릭중앙협의회 복음선교연구실편, 같은 책, 71쪽.

15) 田口芳五郎, 『カトリックの国家観—神社問題を繞りて—』(カトリック中央出版部, 1932); 일본가톨릭중앙협의회 복음선교연구실편, 같은 책, 56쪽.

16) 유가별은 교황청의 신사참배허용에 이르는 과정을 당시의 시대적 배경 속 외교적 노력의 일환으로 추적하고 있다(유가별, 「교황청의 신사참배 허용의 최후 과정」, 『교회사연구 56』, 2020).

장례식을 거행하는 공포분위기가 만들어졌다.

대표적 가톨릭 잡지 『성(聲)』에 도쿄교구장 도이 다쓰오 대주교의 「대동아전쟁과 가톨릭(大東亜戦争とカトリック)」이라는 글이 게재된다. 이 글은 “대동아전쟁의 목적은 종래 대동구제민족에 부과된 불평등한 굴레에서 그들을 해방하고 만민에게 있을 곳을 얻도록 하여 동아에 항구평화의 낙토를 건설하고자 하는데 있다<sup>17)</sup>”고 말한다. 1943년 9월 28일 발표한 일본 천주교 전시활동 지침서에서는 “본 교단은 총력을 결집하여 대동아전쟁의 목적 완수에 매진<sup>18)</sup>”할 것을 표명하고 1944년 7월에는 일본천주교 교단의 국민총궐기 운동을 촉구하여 실시하였다<sup>19)</sup>. 이러한 일본가톨릭의 전쟁협력에 대해서 1995년 성명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처럼 당시 일본가톨릭교회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읽어 그것을 사람들에게 고지하여 경고한다고 하는 에제키엘서의 파수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침략전쟁에 손을 빌려주었다. 일본 교회는 왜 침략전쟁을 올바르고 성스러운 전쟁으로 보았는가, 신학적 근거를 해명하는 것, 왜 그 천황제 국가주의 민족주의의 틀에 갇혀 벗어나지 못했는지 분석하여 신앙의 모습을 물어야 하는 과제가 있다. 현재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이기도 하다<sup>20)</sup>

일본 가톨릭 교회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협력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성명이 나오기까지는 전후 50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

17) 土井辰雄, 「대동아전쟁과 가톨릭」, 『성(聲)』 1943년 8월호(일본가톨릭중앙협의회 복음선교연구실편, 같은 책, 103~104쪽).

18) 「일본 천주교 전시 활동 지침 1943.9.28.」, 『성(聲)』 1944년 6·7월호(일본가톨릭중앙협의회 복음선교연구실편, 같은 책, 105~106쪽).

19) 「일본 천주교 교단의 국민 총궐기 운동(總決起運動)」, 1944년 7월, 일본가톨릭중앙협의회 복음선교연구실편, 같은 책, 108~109쪽.

20) 日本カトリック司教団, 「平和への決意 戦後50年にあたって」 1995.2.25.

다. 1970년 ‘정의와 평화주교위원회’가 발족한 이후에도 일본 가톨릭교회의 역사인식에 변화를 일으켰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엿볼 수 있다. 그것은 정평협이 생겨난 직후 발표된 「현대에 평화를」에서도 드러난다. 이 성명서는 1970년대가 세계, 아시아, 일본에게 평화와 발전을 위한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일본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비교적 장문의 성명서로 14가지 항목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베트남 전쟁의 비극에서 배운 인류가 새로운 평화를 위한 가능성을 탐색해야만 한다”고 선언하며 “고도의 경제력을 자랑하는 일본이 아시아 안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단언한다. 하지만 베트남 전쟁은 언급하면서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아시아 침략 과거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다. 이는 1973년 10월 28일의 야스쿠니 관련 성명서도 마찬가지이다<sup>21)</sup>.

야스쿠니신사는 메이지유신 후 신도(神道)국교화 정책에 의해 신사신도를 황실신도 아래에 재편성해서 국가종교인 국가신도로 만들어 군국주의, 국가주의를 고취하는 이데올로기 장치로 상징적 기관이었다. 제2차 대전 후 GHQ의 신도지령(神道指令)과 헌법 20조(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89조(종교단체에 대한 공적 지원 금지) 규정으로 법적지위를 상실당하였다.<sup>22)</sup> 그런데 일본정부와 야스쿠니신사, 그리고 일본 유족회는 1964년경부터 야스쿠니신사법안을 통과시켜 야스쿠니신사를 일본정부의 관리 하에 두고 정부가 명령을 위무하는 의식, 행사를 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다. 1973년 위의 성명서는 바로 이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히고 있는데, 논지는 정교분리에 입각하고 있으며, 역사문제로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

21) “야스쿠니신사는 틀림없이 하나의 종교입니다. 이것을 국회가 다수결로 종교가 아니라고 결정하는 것(법안2조)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양심의 문제에 정치권력이 개입하는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양심’의 문제를 언급하는 정도이다(カトリック東京大司教区布教司牧協議會-靖国問題実行委員会, 「(東京教区)靖国神社国家管理の立法化に反対」 1973.10.28.).

<https://www.jccjp.org/archives/info/1266.html>(검색일 20211215)

22) 아카자와 시로(박화리역), 『야스쿠니신사』, 소명출판, 2008, 12~13쪽.

지는 않다. 이는 1980년에 나온 「야스쿠니신사 국영화 반대」, 1981년 군대용어 한자의 상용화로 군국주의 부활과 일왕의 신성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상용한자에 관하여」등의 성명서 역시도 역사의식이 실재하는 대외관계 속에서 구체적 유의미성을 띠는 형태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이에 대해서 미요시 치하루는 “1960년대까지 일본인은 전쟁의 피해자의식에 젖어있어서 가해자 의식이 없었으며 일본에게 침략당하고 지배당한 자들에 대한 감각을 결여하고 있었으며 (가톨릭)교회도 그런 사회의 일원으로서 마찬가지로 의식을 공유하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한다.<sup>23)</sup> 그런데 일본 개신교 대표 단체인 일본 기독교단은 1967년 3월 26일 부활주일에 총회 의장 스즈키 마사히사(鈴木正久)의 이름으로 「제2차 세계대전 하에서 일본 기독교단의 책임 고백(이하 고백)」<sup>24)</sup>을 공표하였다. 이 「고백」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인 교회는 그 전쟁에 동조해서는 안 되었다”고 말하며 “교단의 이름으로 전쟁을 용인하고 지지하여”, ‘조국이 범하는 죄에 함께 빠져서’, ‘파수꾼의 사명을 방기하였다’고 고백한다. 이 고백에 대하여 일본기독교단 간토교구(関東教区)는 죄책에 대한 구체적 고백이 없으며 간토교구 「일본기독교단 죄책고백(이하 간토교구 고백)」<sup>25)</sup>을 별도로 발표하였다. 간토교구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죄책 고백은 역사검증을 통하여 교단의 죄책을 명확히 하고, 교단은 같은 하나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팔다리(肢)로서 죄책을 고백하고 책임지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결의를 표명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죄책 고백은 교회의 과거의 죄책을 묻는 것만이 아니라 ‘내일’을 향하여 아시아와 세계

23) 三好千春, 앞의 글, 88쪽.

24) 「第二次大戦下における日本基督教団の責任についての告白Confession on the Responsibility during WWII」  
<https://uccj.org/confession>(검색일 20211215)

25) 「関東教区 日本基督教団罪責告白」  
<http://uccjkanto.holy.jp/syo/zaiseki.html>(검색일 20211215)

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해와 평화를 낳으며 신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명과 책임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것입니다.<sup>26)</sup>

간토교구 고백은 ‘역사검증’을 통하여 잘못을 ‘명확히’한다는 취지에 걸맞게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받들어 전쟁에 협력하는 수많은 과오를 범하였다”고 고백하며 전시에 범한 과오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 당시까지 일본에 “아시아 민주화에 대한 연대투쟁은 존재했지만 식민지 지배에 따른 식민지 역사청산의 역사인식은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상당히 앞서간 입장 표명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일본 사회운동 내에서 70, 80년대에 이르러서야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시민사회의 역사인식이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하였다”<sup>27)</sup>고 한다.

일본가톨릭의 전쟁책임에 대한 반성은 개신교의 고백으로부터 약 20여 년 후에 나왔다. 반성은 1986년 9월 제4회 FABC 총회가 일본에서 개최되면서 미사 강론 중에 나왔다. 당시 일본주교협의회 회장은 시라야나기 세이치(白柳誠一)주교<sup>28)</sup>였는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26) 「関東教区日本基督教団罪責告白 Q&A」  
<http://uccjkanto.holy.jp/syo/zaisekiqa.html>

27) 일본 혁신운동에는 아시아 민주화에 대한 연대투쟁은 존재했지만 식민지 지배에 따른 식민지 역사청산의 역사인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일본 사회운동 내에 반스탈린주의, 반일본공산당, 반제국주의 노선을 표방하는 신좌파세력의 등장과 함께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시민사회의 역사인식이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하였다……일본은 제국주의이며, 따라서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역사청산과 새로운 경제적 침략을 저지하는 반제국주의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역사인식은 1970년대와 1980년대 일본 내 시민운동가들의 한일연대운동의 전성기를 가져왔다(이영채, 「전후 일본의 시민운동과 한일 시민연대-국가주의와 민족주의를 넘어서」, 『황해문화』 48, 2005, 9, 117쪽).

28) 시라야나기 세이치(白柳誠一: 1928~2009)는 도쿄도 하치오지 시에서 태어나 1945년 3월 도쿄 교구의 신학생으로 교세이(스텔라 마리스) 주니어 스쿨을 졸업했다. 1951년 3월에 소피아 대학교에서 철학 학위를 받았고, 1954년 3월 같은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했다. 1954년 12월 21일 간다 가톨릭 대성당에서 사제 서품을 받았다. 1960년에 로마의 교황청 우르반 대학에서 교회법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추기경은 1994년 11월 26일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추기경서품을 받았다. 2009년 12월 30일에 사망하였다. 1970년 정의 평화 위원회를 설립하여, 사회 문제에 대한 발언을 적극적으로 하였으며, 1981년 교황의 첫 일본 방문 관련

우리 일본의 주교는 일본인이자 일본 교회의 일원으로서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불러일으킨 비극에 대해서 하느님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형제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들은 이 전쟁에 관여한 자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면에서도 지금까지 아픈 상처를 남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합니다<sup>29)</sup>.

‘비극’과 ‘상처’의 구체적 내용은 없지만 ‘용서’를 구하면서 ‘반성’을 언급했다는 사실 자체가 갖는 의미는 적지 않았을 것이다.

일본가톨릭 교회가 한국문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던 것은 1970년대 초반이었다. 1973년 12월 30일 도쿄에서 “사회정의를 요구하는 가톨릭 유지회(社会正義を求めるカトリック有志の会)(이하 유지회)”가 “신의 정의와 이웃사랑을 생각하는” 집회를 개최하면서였다. 같은 해 8월 8일 김대중 납치사건이 일어났고 이에 대한 대응이었는데, 유지회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정평협 의장인 시라야나기 주교의 권유였다. 유지회의 멤버 중에는 시라야나기 주교의 조카 시라야나기 유키오(白柳幸雄), 김수환 추기경의 조카사위 송영순 등이 있었다<sup>30)</sup>. 시라야나기 대주교의

---

행사 조직. 1986년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회 제4차 총회를 개최하면서, 도쿄의 성 마리아 대성당에서 거행한 미사에서 처음으로 일본 가톨릭 교회의 전쟁 죄를 인정했다. 1989년 사제, 수녀, 평신도 그룹을 조직해 중국 천주교를 방문하여 일본군이 중국인과 중국 천주교에 대해 범한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였다. 중국의 애국교회와 지하교회의 연대 증진, 가톨릭 교회, 신학교 및 여성 수도회 재건을 도왔다.

[https://www.vatican.va/news\\_services/press/documentazione/documents/cardinali\\_biografie/cardinali\\_bio\\_shirayanagi\\_ps\\_en.html](https://www.vatican.va/news_services/press/documentazione/documents/cardinali_biografie/cardinali_bio_shirayanagi_ps_en.html)(검색일 20211215)

29) 白柳誠一大司教, 「ミサ説教(日本語) 第4回FABC」, 1986.9.21.

<https://www.jccjp.org/archives/info/1296.html>(검색일 20211215)

30) 三好千春, 앞의 글, 88~89쪽; 시라야나기 세이치 추기경은 1986년 과거 전쟁에 대한 반성을 공개적으로 하기 전에 한국의 신학교를 방문하여 사죄를 표한다. 신학생으로서 시라야나기 세이치 추기경의 당시 발언을 듣고 영향을 받은 김동원 신부(동아시아복음화연구원 원장)는 2010년 다롄에서 사목을 하면서 “안중근의사 순국100주년 추모식과 동양 평화 기원 미사” 등의 행사를 조직한다. 이 행사에는 한국의 이용훈 주교와 일본의 타니 다이지 주교, 다카미 미쓰야키 주교 등이 참석하여 아시아의 평화를 기원하였다. 김동원 신부 인터뷰(2022년 5월

한국민주화에 대한 적극적 관심 등으로 정평협에서는 한국의 인권문제 관련 성명서가 다수 나오게 된다.<sup>31)</sup> 후루야시키 가즈요는 로마로부터 정의와 평화위원회를 만들 것을 촉구받아서 만든 후 활동을 모색 중이던 일본 가톨릭교회는 인권을 위하여 군사독재정권에 저항하는 한국 가톨릭교회에 자극 받아 사회 참여에 대해 각성하였다고 말한다.<sup>32)</sup>

다음에서는 일본 가톨릭교회의 역사인식을 역사교과서 문제, 외국인 등록법 지문날인, 야스쿠니 신사,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의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4일 16시~18시, 장소: 동아시아복음화연구원).		
31) 1974.7.12	한국의 인권침해 우려 韓國の人權侵害に憂慮	정평협
1974.7.21	지학순주교 사건 池司敎事件	유지회
1978.10.10	한국인권문제 등 韓國人權問題など	정평협
1979.6.29	김대중 사건과 관련하여 金大中氏事件に關連して	정평협
1980.6.5	광주사태에 대한 우리의 견해(요지) 光州の事態に對するわれわれの見解(要旨)	정평협
1980.10.12	김대중씨 및 정치범, 양심수에 대해서 金大中氏および政治犯,良心の囚人について	제6회 전국회의참가자일동
1982.5.11	최기식신부 체포에 임하며 崔基植神父逮捕にあたって	

32) 아리마 노부오 주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고 한다. “그 당시(1974년) 한국의 지학순 주교가 체포되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도와야한다고 하여 눈앞에 지학순 구제라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활동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김지하라고 하는 가톨릭의 유명한 시인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고 하여 활발하게 활동하였습니다. 한국 교회가 사회문제, 특히 인권문제, 정의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기때문에 우리는 많이 배웠던 것입니다. 가톨릭은 이러한 면도 있다는 것을. 가톨릭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고 양전하게 있으면 되는 것인가 하는 느낌이었는데, 아니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것을 한국에서 우리는 아주 많이 배웠던 것입니다.”[有馬信夫 日本カトリック正義と平和協議會編, 『正義と平和講演録 平和のために働く人はしあわせ』, カトリック中央協議會, 2002, 裏表紙(屋敷一葉, 『「正平協」の切り開いた道—1970年代韓国民主化闘争支援活動を通して』, 同志社大学修士論文, 2018, 2~3쪽에서 재인용)].

### III. 정의 평화협약의 메시지를 통해서 본 전후 역사인식

#### 1. 역사교과서 문제

일본 정평협약의 1972년 한국의 인권관련 성명서에 한국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한 한국인들의 “고통에 대한 책임의 일단이 일본인에게 있음을 깊이 아프게 반성한다”<sup>33)</sup>는 표현이 보인다. 여기서 말하는 ‘책임의 일단’이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일본 정계의 직간접적 책임을 의미하는 것인지, 혹은 과거 일본제국의 역사적 과오의 결과물이라는 것인지, 둘 다를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김대중 납치 사건관련 성명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한일 양국의 현정권 사이에 깊은 연계를 생각한다면 기성 사실의 변경에는 커다란 저항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국의 주권, 및 김대중씨 개인의 인권, 나아가 하느님 앞에서의 양심으로 돌아가 생각하면 현상을 방치하는 것은 한시도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sup>34)</sup>.

여기서 일본정부가 한국정부의 인권유린을 방조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은 읽을 수 있으나, 과거 역사와의 연관 속 문제의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에 변화를 일으켰던 것은 1981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일본 방문과 그 해 2월 25일 히로시마 평화기념 공원에서 교황이 전세계를 향하여 9개 국어로 행한 「평화메시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교황 요한바오로

---

33) 日本カトリック正義と平和協議会, 「韓国の人権侵害に憂慮」, 1974.7.12.  
<https://www.jccjp.org/archives/info/1267.html>(검색일 20211215)

34) 日本カトリック正義と平和協議会 担当司教 相馬信夫·会長 森田宗一, 「要請文 金大中氏事件に関連して」, 1979.6.29.  
<https://www.jccjp.org/archives/info/1271.html>(검색일 20211215)

2세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인류가 자행할 수 있는 끔직한 파멸을 보여 주는 도시이며, “전쟁은 인간의 행위이다. 전쟁은 인간 생명을 파괴하며, 전쟁은 죽음이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미래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일이다”라고 호소하였다<sup>35)</sup>. 교황의 메시지에 대한 응답으로 1981년 7월에 일본 주교위원회는 책자를 발간한다<sup>36)</sup>. 그런데 여기서 ‘과거를 돌아 본다’는 것은 히로시마의 원폭피해를 돌아보는 것으로 ‘세계유일의 피폭국’이라는 ‘피해자 의식’에서 비핵화와 평화를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의 「평화메시지」가 일본가톨릭교회가 과거사를 돌아보는 어떤 전환점이 되어 이후 성명서에서 변주되어 반복적으로 언급된다.

1982년 6월 25일에 일본 문부성은 1983년도 고등학교 사회교과서의 검정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본 언론은 검정과정에서 ‘침략’이라고 하는 표현을 약화시키고, 오키나와전에서 일본군에 의한 주민살해 사실을 삭제하고자 하였다고 비판하였다. 일본 내부에서 시작된 이 비판은 외교 문제로 전개되어 11월 ‘근린국가 조항(近隣諸國條項)’이라는 새로운 검정기준을 신설하면서 일단락되는데,<sup>37)</sup> 이것을 일본에서는 제1차 교과서 문제라고 칭한다. 이에 대해서 정평협은 일본기독교단과 일본그리스도교협회의 야스쿠니신사문제특별위원회 등과 함께 1982년 7월 30일에 「교과서 문제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과거의 전쟁이 아시아 각국, 특히 중국에 대한 ‘침략’이라는 것이 명백한 역사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진출’이라고 고치고 조선 타이완의 식

35) 教皇ヨハネ・パウロ二世, 「広島『平和アピール』」, 1981.02.25.

<https://www.cbcj.catholic.jp/1981/02/25/3446/>(검색일 20211215)

36) 『平和と現代の日本カトリック教会 教皇『平和アピール』に答えて』, カトリック司教協議会, 1981.10.20.

37) 辛珠栢, 「韓日歴史教科書問題の史的展開 (1945~現在): 1981年と2001年の展開様相を中心に」, 『第二部 制度・変遷 教科書編纂制度の変遷・教科書問題の史的変遷』, 日韓歴史共同研究委員会, 2010.3.

민지 통치에서 민족적 자주성의 압살, 수탈의 역사 등을 감히 감추고자 하고 있다. ...아시아의 여러 교회와 교류하면서 일본의 '우경화'를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일찍이 일본의 교회가 정부의 행위를 추수하고 또한 묵인하는 것으로 그 죄 많은 제2차 대전에 협력한 우리 자신의 책임을 기억하는 바입니다.<sup>38)</sup>

일본의 정평협은 이러한 행위가 문부성이 “일부 강경한 의견으로 교과서 검정을 유도”하여 다음 세대 국민이 “자국이 범한 과거의 범죄적 사실에 눈감게 하고, 지식을 방해받아, 역사적 시야가 편협해져 국제사회의 평균적 역사인식에서 고립된 국민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이 성명서 발표로부터 40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이 성명서의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성명서는 정평협이 역사문제에 대해서 아시아와의 관계사 속에서 구체적 역사적 사실을 들어 입장을 표명한 첫 번째 성명서라고 말할 수 있다.

제2차 교과서 문제는 1987년에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日本を守る国民会議)(현 일본회의)’와 하라쇼보(原書房)가 1987년 발행한 고교 교과서 『신편 국민일본사(新編國民日本史)』<sup>39)</sup>에 대해 중국이 비판하자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수상이 문부성에 검토를 요청하여 재심의한 일을 말한다. 『신편 국민일본사』는 “황실에 대한 경의를 키운다”, “신화를 통하여 건국을 이해한다”라는 방침으로 편찬되어 천황의 인간선언을 게재하지 않는 등 천황중심의 기술이 많았다. 『신편 국민일본사』는 검정을 통과했지만 아사히신문 등의 비판 기사로 채택률은 낮았다. 제2차 교과서 문제

38) 日本カトリック正義と平和協議会担当司教 相馬信夫・日本基督教団総幹事 中嶋正昭・同教育委員会・社会委員会・靖国神社問題特別委員会・日韓連帯特別委員会・日本キリスト教協議会・靖国神社問題特別委員会委員長 大島孝一, 「教科書問題についての声明」, 1982.7.30.  
<https://www.jccjp.org/archives/info/1281.html> (검색일 20211215)

39) 朝比奈 正幸, 『新編 国民日本史』, 原書房, 1987.

가 생겨난 시점에서 정평협의 성명서는 별도로 나오지 않았다.

제1차 교과서 문제와 제2차 교과서 문제보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회[新し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会; 회장 니시오 간지(西尾幹二)]’가 만들어 후소샤(扶桑社)에서 출판한 『새로운 역사교과서(新しい歴史教科書)』<sup>40)</sup>가 2001년 교과서 검정에 합격한 일이다. 제1교과서 문제를 발단으로 역사교과서 문제는 역사인식 문제와 연동하여 한국, 중국과의 외교문제로 비화되는 현재의 문제이기도 하다. 2001년 4월 3일 후소샤의 중등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자 일본가톨릭 주교협의회 한 일 사목교류 담당 주교 오카다 다케오(도쿄교구 대주교), 정평협 담당 주교 오쓰카 요시나오(교토교구 주교) 등 10인의 주교명으로 2001년 5월 7일 ‘우려 표명’이 나왔다.

성명서는 “과거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 역사를 왜곡하여 천황제 지배를 찬미하는 듯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 것은 “일본제국군대가 행한 침략과 만행의 역사를 은폐하고 전쟁의 미화, 가해 책임 회피를 교육하는 일이다”라고 우려한다. 이어서 “국가와 민족을 초월한 아시아 연대를 구축하여 새로운 21세기를 만들 것을 희망한다”며 다음과 같이 표명한다.

일본국으로서 역사에 대한 성실함을 말과 행위로 표명하고 아시아 각국의 신뢰를 획득할 것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과거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반성하여 두 번 다시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는다는 결의와 노력 위에 아시아 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하여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이 피해를 준 아시아 국가들 측의 시점에 서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만드는회’의 역사관은 정의, 평화,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회를 함께 만들고자 하는 아시아 사람들의 바람을 짓

40) 西尾 幹二, 『新しい歴史教科書一市販本』, 扶桑社, 2001.

밝는 것이며 그러한 역사관으로 왜곡된 교과서가 검정에 합격한 일에 대해서 우리들은 마음으로부터 우려하며 유감의 뜻을 여기에 표명합니다.<sup>41)</sup>

이 성명서는 ‘성실한’ 역사관이 오늘의 아시아 연대와 ‘정의, 평화,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희망이 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 가해국은 피해국의 입장에 서는 역사관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이 성명서에 서명한 일본 주교는 정평협 담당 주교 포함 10명이었는데, 당시 일본천주교 주교회의의 회원은 모두 17명이었다.

이 성명서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일주교교류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일주교교류모임은 1996년 2월 16일 한국의 이문희 대주교와 일본의 하마오 후미오 주교가 일본 가톨릭회관에서 만나면서 시작되었다. 첫 회의의 의제가 한일 교과서 문제였으며, 주교교류모임이 양국 역사인식의 차이 극복에 노력하였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sup>42)</sup>. 이에 대해서 최영균은 “한일주교모임의 최초 과제가 한일역사의 상호이해와 대안적 교과서였다는 것은 동아시아 연대의 시민사회적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도 의미심장한 사건”이라고 하였다. 또한 양국 교회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 간 갈등 지점에 주목” 하여 ‘시민사회 차원’에서 ‘동아시아 연대’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한다.<sup>43)</sup>

교과서와 관련하여 지역단위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 행동 관련 메시지가 나오기도 하였다. 도치기현 오타와라시(栃木県大田原市)에서 2006년도 중학교 교과서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회’의 교과서가 선정되었

41) 日本カトリック司教協議会 日韓司教交流担当 東京教区大司教 岡田武夫: 正義と平和協議会担当 京都教区司教 大塚喜直 외, 『教科書検定合格に関する憂慮表明』 2001.5.7.  
<https://www.jccjp.org/archives/info/1330.html>(검색일 20211215)

42)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로: 한일주교교류 모임 자료집(1996~2001)』,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2.

43) 최영균, 「한일주교교류의 성과와 전망: ‘연대’ 신학의 증범위 이론을 위하여」 『동아시아 복음화연구원 제5회 학술 심포지엄 자료집 동아시아 사회와 가톨릭교회』, 2017.5. 29쪽.

다. 이 사실을 염려하면서 효고현 다카라즈카시(兵庫県宝塚市) 교육위원회에게 이 교과서를 채택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한다.<sup>44)</sup> 이 메시지는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회’의 교과서가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 역사를 긍정하고, 천황제를 찬미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전쟁의 비참함을 가르치지 않으며, 평화헌법 9조를 부정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는 동아시아의 공통의 역사인식과 거리가 먼 것으로 ‘고립된 국가’를 만들어 젊은이들이 아시아 사람들과 관계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을 가르치지 않는 일이라고 우려한다. 이는 한일주교교류모임의 청년모임에서 실제로 관계 맺기의 어려움이 드러났다고 다수의 관계자들이 증언하고 있다<sup>45)</sup>. 이 성명서는 “아시아 국가들과 화해와 연대를 위해서는 과거 역사의 아픈은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연대해야 한다”고 말한다. 화해와 연대를 위한 기본적 자세에 대한 제시라고 할 수 있다. 다카하시 테쓰야는 “자기 자신의 체험 속에 틀어박혀서 타자의 입장을 상상”하거나 “자신의 체험을 타자의 경우와 대조해 가며 반성하는 일이 아주 불가능하게 되면 자폐적인” 상황이 만들어져 공존이 어려워진다고 말한다. 실제로 일본 사회가 역사인식에서 ‘자폐적’ 상황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적지 않다. “판단을 행할 때는 가능한 타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상상력의 운동이 필요”하다는 다카하시의 이야기와 함께 정평협외의 메시지는 되새겨볼 만하다.<sup>46)</sup>

44) 日本カトリック正義と平和協議会 事務局長 長澤正隆, 「‘新し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会’の教科書の不採択のお願い」 2005.8.8.

<https://www.jccjp.org/archives/info/1343.html>(검색일 20211215)

45) 2021년 12월 2일 동아시아복음화연구원 선교위원회 월례발표회에서 김동원신부 증언: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양강의에서 어느 재일 조선인유학생은 “왜 귀화하지 않느냐”고 묻는 다른 수강생에게 자신이 귀화할 수 없는 것은 “역사를 알아버렸기 때문이며, 역사를 알기 전과 후의 자신은 완전히 다른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역사인식이 정체성 구성에 있어서 핵심적 사안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46) 서경식·타카하시 테쓰야, 『전쟁의 기억을 둘러싼 대화 단절의 세기 증언의 시대』, 삼인, 2002, 91쪽.

## 2. 외국인 등록법, 지문날인 문제

식민지 시기 조선을 벗어나 일본에서 살게 된 조선인들은 1945년 일본의 패전 당시 약 200만 명 정도였으며, 조선독립 후 상당수가 돌아왔지만 잔류한 조선인들이 5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조선의 불안정한 상황과 기타 다양한 이유로 돌아올 수 없었던 것이다. 이들은 1947년 일본 정부의 ‘외국인 등록령’이 공포 시행되면서 ‘일본’ 국적에서 “당분간 외국인으로 간주”된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서 외국인(무국적 상태의 조선인)이 되었으며 1955년부터 외국인 대상의 지문날인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 운동에 커다란 한 획을 그었던 것은 1980년 9월 한중석이 신주쿠 구청에서 일본의 ‘외국인 등록령’에 기초한 지문날인을 거부한 일이었다. 이후 재일 코리안의 지문날인 거부 투쟁은 일본 전역으로 확대되었고 “재일 대한민국 부인회, 재일한국 청년회, 일본의 학자, 변호사, 사회운동단체, 저널리스트들이 합류하면서 1984년 9월 지문날인거부예정자회의가 결성된다.<sup>47)</sup> 한중석의 1인 시위 이후 10년이 지난 1991년 ‘재일 한국인 법적지위 및 처우에 관한 각서’가 한일 외상회의에서 결정되면서 입국관리 특별법이 제정되어 재일코리안의 법적 지위가 특별영주가 되면서 지문날인제도에서 제외되었다.

정평협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일본 주교협의회에서 처음 지문날인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온 것은 1984년 이었으며, 1991년까지 총 8개의 메시지가 나왔다.<sup>48)</sup> 1984년 최초의 성명서는 나카소네 야스히로

47) 신명직, 「재일 코리안과 다국가 시민권」, 『석당 논총』 56, 2013.7, 53쪽.

48) 1984.2.28	外登法、指紋押捺	建議書
1985.7.12	外国人登録法の改正を求める	要請書
1985.7.16	外国人登録法快晴指紋押捺制度反対	意見書
1985.9.7	指紋押捺問題	要望書
1986.1.7	外登法、指紋押捺	ご質問状

수상 등 정부관계자에게 보내는 형식을 띠고 있는데, “한일 양국의 우호와 화해는 아시아 평화의 기초”라면서 한일 양국의 오랜 역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아소카시대부터 도자기, 제지 등 일본의 문화는 ‘조선 문화의 깊은 영향 아래’ 있었으나 도요도미 히데요시에 의한 조선침략, 36년 동안의 식민지 지배 등으로 ‘조선인 한국인 형제자매에게 부정과 고통, 죽음까지’ 안겨 준 사실을 직시하여 엄숙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 일본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정직하게 직시하여 일본인 전체가 특히 재일한국인·조선인 형제자매에게 부여한 부정한 죄의 용서를 구하고 개심과 보상 정신을 마음에 새겨서 신뢰와 우호관계 수립에 나서야만 한다. 그를 위해서 우선 신뢰와 우호관계의 장애가 되는 것을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제거해야만 한다.<sup>49)</sup>

그리고 장애의 대표적인 것이 16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지문날인제도이고 이를 신속하게 없애야 한다고 말한다. 이 메시지에는 식민지와 식민 이후, 지문날인제도의 폭력적 모순을 유기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적어도 지문날인제도가 역사적 관련 속에서 재일코리아들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사실은 말한다. 그 이후 나온 성명서들은 외국인 지문날인 문제는 바로 재일코리아 문제라는 사실을 지적하며,<sup>50)</sup> “지문날인은 일본인 전체가 특히 재일한국인·조선인 형제

1986.2.19	外登法問題に関する	要望書
1986.5.19	ベトロ金明植氏の在留更新	要望書
1986.10.12.	「指紋押捺問題に理解を」	アピール

49) 日本カトリック司教協議会 社会司教委員会, 「建議書 外登法, 指紋押捺」, 1984.2.28.  
<https://www.jccjp.org/archives/info/1283.html>(검색일 20211215)

50) 1985년 7월 16일 메시지는 지문날인 대상 외국인의 86%를 차지하는 것이 재일코리아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되새겨 지문날인 폐지를 요망한다(日本カトリック正義と平和協議会, 「意見書 外国人登録法快晴指紋押捺制度反対」, 1985.7.16.).

자매에게 가한 역사적 부정에 더해진 죄(加えられる罪)의 하나라고 생각한다”<sup>51)</sup>고 말한다. 여기에서 ‘더해진’이란 1984년 첫 성명서에 한발 나아간 역사인식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들어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국과 제국의 해체가 자의적으로 ‘국민’의 범주를 구성할 때 그 경계에 있는 이들에게 어떠한 폭력이 더해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사유로 조금 더 다가가고 있는 듯하다.

지문날인과 외국인 등록법과 관련하여 일본의 가톨릭교회가 성명서를 낸 데에는 일본에 들어와 있는 유럽 신부들의 영향이 컸던 듯하다. 유럽에서 온 신부들이 재일코리안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지문날인을 거부하였으며 이 사실이 중요한 추동요인이 되었다. 특히 재일코리안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사목을 하고 있던 신부들이 이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메시지에는 선교사들의 유의미한 이야기들이 담겨있는데, 가와사키시(川崎市) 아사다(淺田) 성당의 사제로 폴란드 신부 [Edouard BRZOSTOWSK(1932~)], 고토쿠(江東区) 시오미성당(潮見教会) 주임사제로 프랑스에서 온 콘스탄 루이신부(1927~2015), 센다이교구(仙台教区)의 벨기에에서 온 에티엔느 드 구도네르 신부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사제들은 자신들은 유럽인이었기 때문에 차별을 별로 느끼지 않았다고 말한다. 루이 신부는 지문날인을 거부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고토쿠 아리노정(巖の町), 시오미성당 인접지역에 재일코리안이 다수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역 문제에 관계하면서 ‘외국인등록법’ 특히 지문날인제도와 외국인 등록증명서 상시휴대 의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

<https://www.jccjp.org/archives/info/1286.html>(검색일 20211215)

51) 日本カトリック司教協議會 社会司教委員会 委員長 白柳誠一, 「要望書 外登法問題に関する」 1986.2.19

<https://www.jccjp.org/archives/info/1293.html>(검색일 20211215)

롭히고, 눈물짓게 하는 ‘악법’인지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인은 재일코리안처럼 차별받지 않기 때문에 지문날인을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런 생각이 재일코리안 68만 명을 고통스럽게 하고 차별을 용서하는 것이며 나아가 나 스스로가 차별을 범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sup>52)</sup>

이러한 선교사들의 입장에 대해서 일본 가톨릭교회는 법무장관에게 보내는 요청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옹호한다.

외국인 선교사는 재일 조선 한국인에 대한 법 운용에서 차별과 불평등에 마음 아파하며 양심에 따라 자신이 반대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굴욕을 주는 측에 가담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외국인등록법 개정을 요구하고 지문날인 거부를 하고있는 그들의 행위는 양심과 신앙의 자유에 근거한 인간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sup>53)</sup>

이 메시지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공감하지 않고, 지지하지 않는 것은 그들에 대한 억압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명언한다. 지문날인 거부는 사법적 판단의 영역에 놓여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가톨릭 신자들에게도 이에 대한 입장표명과 설득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본 교회는 그리스도의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여라”는 말씀을 재일 코리안과 일본인의 진정한 우호와 신뢰관계 수립을 위하여 구체적인 계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공언한다. 또한 한국인 유학생의 지문날인 거부

52) 日本カトリック正義と平和協議会 外国人登録法問題臨時委員会 事務局長 深水正勝, 「要望書 指紋押捺問題」 1985.9.7.  
<https://www.jccjp.org/archives/info/1288.html>(검색일 20211215)

53) 日本カトリック司教協議会 社会司教委員会 委員長 白柳誠一, 「要望書 外登法問題等に関する」 1986.2.19.  
<https://www.jccjp.org/archives/info/1293.html>(검색일20211215)

에 대해서도 “법(안식일)이 인간을 위하여 있으며, 인간이 법(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행위라고 말한다. 따라서 재일조선인에게 연대를 표명하면서 지문날인을 거부하고 있는 사제들의 행위는 그리스도교의 신앙에 근거하여 ‘작은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깊이 마음에 새겨 응원한다고 지지를 표한다. 이 메시지는 당시 일본 가톨릭 사목협의회 사목위원회 시라야나기 세이치 위원장이 법무대신 스즈키쇼고(鈴木省吾) 앞으로 보낸 요청서의 형식을 띠고 있었다. 일본교회는 교회가 사회문제에 관계하는 일을 그리스도교의 ‘구원’과 연계해서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다.

사회문제란 자신과는 관계없는 먼 곳의 일인 것처럼 받아들이기 쉽지만 사실은 우리들에게 소중한 한 사람 한사람의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들은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자녀로서 한 사람 한사람이 소중하게 대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사이 좋게 지내길 기원합니다. 그리되지 않는 현실적 배경에는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 정치, 경제를 포함한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러한 문제를 복음적인 시점에서 지적하고 관계하는 일은 이 세상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는 ‘화해의 실현’과 ‘구원’을 위한 일입니다<sup>54)</sup>.

모든 인간은 하느님의 자녀로 평등하며 소중하기 때문에 어떠한 인간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교회의 입장이 지문날인을 둘러싼 제도 문제에서 드러나고 있다.

54) 日本カトリック司教協議 会社会司教委員会, 『なぜ教会は社会問題にかかわるのか Q&A』, カトリック中央協議会, 2012.2.15. 21쪽.

### 3. 야스쿠니 신사 문제

일본 메이지 국가는 “국가가 신기적 제사체계를 흡수하여 국가 그 자체가 새로운 제사성을 갖추고 재형성” 되었으며, 이것이 “인민에 대한 구심력을 지닌 신성황국 일본이 등장하여 세속적 황민(皇民) 내셔널리즘을 환기시켜” 궁극적으로 전쟁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 고야스 노부쿠니는 ‘국가신도’라고 명명하며<sup>55)</sup> 그 중핵에 바로 야스쿠니신사가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일본을 점령한 미국의 중요 점령정책의 하나로 신도지령(神道指令)<sup>56)</sup>이 나온다. 신도지령은 1945년 12월 15일 연합군의 최고사령관 총사령부에서 발간한 「국가신도, 신사신도에 대한 정부의 보증, 지원, 보전, 감독 및 홍보(弘布)에 관한 것」에 실린 일본제국 정부에 대한 각서이다. 이 신도지령 제1조는 “국가에서 지정된 종교 내지 제식에 대한 강제적(직접적 또는 간접적) 신앙 또는 신앙고백으로부터 일본 국민을 해방”하기 위하여, 그리고 “신도의 교리 및 신앙을 왜곡해서 일본 국민을 속이고 침략 정책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의도된 군국주의적 내지는 과격한 국가주의적 선전에 이용되는 일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려졌다. 이 지령의 목적은 종교와 국가를 분리하는 데 있다고 하여 정교분리 원칙을 명확히 하였다. 이 정교분리 원칙은 일본국 헌법(1946년 11월 공포) 제20조 1항 어떠한 종교단체도 국가로부터 특권을 받거나 또는 정치적인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제3항 국가 및 그 기관은 종교교육 기타 어떠한 종교적 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 제 89조 종교단체 및 조직의 활동에 대한 공금의 사용과 공적인 편의 제공을 금지한다고 명확히 밝힌 것과 궤를 같이한다. 일본제국의

55) 고야스 노부쿠니(김석근역), 『야스쿠니의 일본 일본의 야스쿠니』, 산해, 2005, 172쪽.

56) GENERAL HEADQUARTERS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SOWERS AG 000.3 (15 Dec 45) CIE, *The Shinto Directive*, 15 December 1945  
<https://kaze-yashiro.com/shinto-directive/trackback/>

전쟁과 종교(신도)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이것이 전쟁에 국민을 용이하게 동원하는 중요 요인이었다는 판단이었다. 따라서 신도지령은 이것의 재발 방지를 위한 장치였다고 말 할 수 있다.

그런데 전후 일본에서는 신사본청(神社本庁)과 일본유족회(日本遺族会)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야스쿠니신사를 국가수호 위령시설로 만들자’는 운동이 전개되었다. 여기서 신사본청은 이세신궁을 본종으로 한 일본 각지의 신사를 포괄하는 종교법인을 말한다. ‘庁’이 붙지만 관청이 아니라 종교법인법에 근거한 문부과학대신이 관할하는 종교법인이다. 이러한 움직임이 1964년 자유민주당 내각부회(自由民主党内閣部会)에 ‘야스쿠니신사 국가 수호에 관한 소위원회(靖国神社国家護持に関する小委員会)’설치를 낳으며 야스쿠니신사 국가관리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후 1969년부터 1972년에 걸쳐서 의원 입법되어 자민당이 매년 제출하였지만 모두 폐기되었다. 1973년 법안은 1974년 중의원에서 가결되었지만 참의원에서 폐기되었다<sup>57)</sup>.

바로 이 시기에 일본 가톨릭교회는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다. 1973년 10월 28일에 나온「야스쿠니신사 국가관리 입법화 반대」성명서가 바로 그것이다<sup>58)</sup>. 이 성명서는 야스쿠니 신사는 “종교임이 틀림이 없으며 이것을 국회가 다수결로 종교가 아니라고 결정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마음의 문제에 정치권력이 개입하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또한 야스쿠니 신사를 국가법인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국가가 전몰자를 영령으로 제사지내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전사(戰死)를 미화하여 국민에게 전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의도가 느껴진다”

57) 야스쿠니 법안 특징 등에 대해 자세하게 논하고 있는 것은 아카자와 시로이다(아카자와 시로 (박화리역), 앞의 책. 158~162쪽 참조).

58) カトリック東京大司教区布教司牧協議会 靖国問題実行委員会, 「靖国神社国家管理の立法化に反対」1973.10.28.

<https://www.jccjp.org/archives/info/1266.html>(검색일20211215)

고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1968년 1월 가톨릭중앙협의회는 신도법안 반대운동에 참가할 것을 인정하였다. 1969년 5월 교회일치촉진위원회·이토쇼지로(伊藤庄治郎) 주교 명의로 법안 취급을 신중하게 해줄 것을 사토 에이사쿠 수상에게 요망하였다. 그 후 정평협에서 이 문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 도쿄교구에서는 1971년 교구대회에서 법안반대를 가결하였으며 포교사목협의회 야스쿠니문제 실행위원회를 두는 등 교구의 자세를 분명히 하였다. 1973년 8월 자민당 단독으로 심의하고자 하였을 당시 시라야나기 대주교가 다나카 가쿠에 총재에게 서간을 보내 반대하는<sup>59)</sup> 가운데 이 성명서가 나왔던 것이다.

그로부터 2020년까지 야스쿠니 관련 성명서는 4회 정도 더 나왔다. 특히 1980년 10월 6일 주교단에서 발표한 성명서는 다른 성명서들과 달리 ‘야스쿠니 법안’에 반대하는 주교단 최초 공동성명이다. 그때까지 정부에 대한 성명은 교구 혹은 위원회 단위에서 나왔다. 일본 가톨릭 주교단은 이번 ‘야스쿠니신사 법안’이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에 반하며, 일본국 헌법의 기본이념을 저해한다고 반대의견을 표명하였다. 그리고 10월 17일 선거를 호소하는 요망서를 스즈키 요시유키 내각총리 대신 앞으로 전 주교 연명으로 제출하고 기자회견하였다. 이에 대해서 “일본 가톨릭 교회의 ‘야스쿠니신사’에 대한 공식견해로 역사적으로 획기적이며 다른 종교단체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sup>60)</sup>하는 평가가 있다.

이 성명서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라야나기 주교를 비롯한 교회 내의 움직임 들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천황의 윤리성을 세계적으로 공표하여 국민의 규범으로 확립하고자 하여” 개최되는

59) 『『靖国法案』に反対 司教団はじめて共同声明』, 『東京教区ニュース第35号』1980.11.01., <https://tokyo.catholic.jp/info/news/10950/>(검색일20220123)

60) 같은 글.

‘세계종교자윤리회의’<sup>61)</sup>에 일본가톨릭교회가 깊이 관여한 사실을 들 수 있다. 그 결과 일본가톨릭교회가 “국가신도의 재생과 군국주의 부활에 힘을 빌려주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우익 경도” 이미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sup>62)</sup> 세 번째는 다음 해 교황의 일본 방문이다. 교황은 세계평화와 인류애 호소를 위하여 히로시마에서 원폭희생자 위령비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야스쿠니신사문제는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어 군국주의의 길로 내몰 수 있는 사안으로 교황의 노력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일본주교단의 입장표명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성명서의 내용은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은 일본 헌법의 기본원리이며 야스쿠니신사 국영화 법안은 이에 반하는 것으로 이에 반대한다고 표명하고 있다.

1985년 일본 총리 나카소네 야스히로가 야스쿠니 신사에 정식으로 참배하자, 중국과 한국 등 아시아 각국은 이를 강력하게 비판했으며 일본 국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일어났다. 일본 총리의 공식참배가 중지되었다. 1985년 나카소네 총리의 공식참배에 대해 3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었으나 모두 청구가 기각되었다(播磨, 関西, 九州). 그러다 1992년 2월 후쿠오카 고등법원은 총리가 공식참배를 반복한다면 위헌이라고 판결했고, 1992년 7월 오사카 고등법원은 ‘종교적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헌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61) 세계종교자윤리회의世界宗教者倫理會議는 1979년 6월 23일 세계 6대종교(불교, 그리스도교, 힌두교, 이슬람교, 유대교 신도)의 대표적 지도자가 도쿄에 모여 자연과 인간의 상관관계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다시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최. 주최는 일본종교대표자회의가 사무총국을 메이지신궁 안에 두고, 사무총장은 소에지마 스스무(副島權) 궁사(宮司)였다.

<https://www.rekishidb.meijijingu.or.jp/glossary/detail.php?id=136>(검색일 20221213)

62) 세계종교자윤리회의에 대해 정평협 회원 일동은 일본우파세력이 야스쿠니 법안, 원호법제화, 천황공식 참배 등을 달성하고자하는 포석, 국론을 양분하는 일로 가톨릭교회의 참여에 우려 의견을 냈다. 日本カトリック正義と平和協議会会員一同, 「意見書 世界宗教者倫理會議について」 1980.5.7.

<https://www.jccjp.org/archives/info/1272.html>(검색일20221213)

그 후 한동안 일본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는 중단되었다가 2001년 8월 13일 일본의 신임 총리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가 다시 공식 참배하였다. 2001년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서는 일본 시민 사회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으며 일본 시민 재일 외국인 등이 도쿄, 치바, 오사카 2 건, 마쓰야마, 후쿠오카, 나하 지방법원에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2004년 7월 후쿠오카 지방법원은 총리의 참배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일본가톨릭 정의와 평화협의회 회장 마쓰우라 고로(松浦悟郎) 주교는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공식참배가 예고되던 그해 6월 29일에 메시지를 냈다. 그 글에서 마쓰우라 주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야스쿠니 신사가 일찍이 전쟁 전몰자를 영령으로 제사지내 전사(戰死)를 미화하고 국민에게 전쟁을 긍정적으로 인식시키는 중심적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에 대한 반성에서 정교분리원칙을 정해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걸어왔던 것이 아닌가요. 총리대신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그 걸음을 재차 ‘언젠가 왔던 길’로 되돌리는 중대한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일본제국군대의 침략으로 무참하게 살해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람들의 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유족은 자신들의 육친을 살해한 사람이 신으로 합사되어 있는 장소에 일본 총리대신이 참배하는 것을 어떤 마음으로 지켜볼까요.<sup>63)</sup>

이글은 앞서 정교분리와 위헌에 대한 성명서에 한걸음 더 나아가 일본의 역사문제와 연결시킨 성명문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제언을 덧붙이고 있다.

63) 日本カトリック正義と平和協議会会長松浦悟郎司教, 「総理大臣の靖国神社参拝に対する反対表明」 2001.6.29.

<https://www.jccjp.org/archives/info/1332.html>(검색일20211215)

총리대신이 야스쿠니 신사가 아닌 장소에서 일본인만이 아니라 제2차대전으로 생명을 잃은 이름 없는 전몰자를 위하여 나아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모든 희생자를 위하여 마음으로부터 빌며 평화에 대한 결의를 새로이 할 것을 제안합니다.

새로운 제안이 받아들여지는 일 없이 고이즈미 수상은 2005년 10월 17일 아침 많은 논란 속에서 재차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강행하였다. 이에 대해서 정평협 회장 마쓰우라 고로는 고이즈미 총리 앞으로 서한을 보낸다. 서한은 “아시아 각국에게 범한 침략전쟁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평화주의와 국민주권, 기본적 인권 존중을 바탕으로 한” 우호관계를 쌓기 위하여 노력해온 정평협은 고이즈미수상에게 엄중 항의한다로 시작된다. 오사카 고등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했음에도 ‘전시 천황제 군국주의의 정신적 지주’였던 야스쿠니 신사참배 강행은 ‘60년 전의 전쟁을 긍정’하고 ‘나라를 위하여’ 죽는 것을 미화하는 일이라고 비판한다. 나아가 아시아-태평양 전쟁에서의 사망자와 지금도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피해자를 짓밟는 행위라면서 고이즈미수상의 야스쿠니참배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였다. 정평협은 야스쿠니신사 관련 입장표명에 적극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시기에 성명서를 꾸준히 내고 있다고 볼 수는 있다.<sup>64)</sup>

연월	제목	성명서 명의
1973.10.28	(東京教区) 靖国神社国家管理の立法化に反対	カトリック東京大司教区布教司牧協議会 靖国問題実行委員会
1980.10.6	靖国神社国営化反対	
1985.8.12	要望書 靖国神社公式参拝反対	日本カトリック司教協議会 日本カトリック正義と平和協議会 会長 相馬信夫
2001.6.29	総理大臣の靖国神社参拝に対する反対表明	
2005.10.18	靖国神社参拝の強行に抗議します	

#### 4.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가톨릭의 입장표명은 1994년 12월 29일에 나왔다. 당시 총리 무라야마 도미이치에게 보내는 요망서 형식이었으며 가톨릭 도쿄대교구 교구장 시라야나기 세이치 추기경의 명의였다<sup>65)</sup>.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었지만 1991년 8월 14일 김학순이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걸고 공개적으로 피해를 밝히면서 공론의 장에 등장한다. 그리고 12월 6일 3명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법원에 전후 보상 청구를 하였으며, 1993년 8월 4일 고노 관방 장관의 담화가 발표되었다. 이 담화는 일본 정부가 일본군의 위안소 설치와 관리, 이송을 인정하고 처음으로 사죄를 표명한 것이다. 그리고 1994년 연립내각이 등장하고 사회당 대표인 무라야마 도미이치가 내각 총리대신이 되었다. 무라야마 내각은 전후 50주년을 맞아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하여 반성과 사과를 표명하였다. 무라야마 정권 당시 1995년 7월 19일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이하 국민기금으로 약칭)’이 설립되었다. 국민기금은 재단법인의 형태였으며 약 5억 엔의 관리경비는 국고에서 지출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모두 국민모금으로 충당하였다. 이는 정부에 의한 국가 보상의 형식을 피해가고자 하는 꼼수였다. 이처럼 국가보상을 피하면서 ‘국민’에 의한 사죄를 한다는 애매한 성격은 국가에 의한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들로부터 비판의 초점이 되었다.<sup>66)</sup>

시라야나기 추기경의 요망서는 바로 이 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중

65) 枢機卿 白柳誠一, 「要望書 元「從軍慰安婦」補償問題」, 1994.12.29.

<https://www.jccjp.org/archives/info/1324.html>(검색일 20211215)

66) 우에노 지즈코(이선이역), 「국민기금의 역사적 평가를 위하여」, 『위안부를 둘러싼 기억의 정치학』, 현실문화, 2014, 256~257쪽.

군위안부제도는 일본군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직접 기획하여……병사들의 성노예로 삼은 인도에 반하는 범죄”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 여성들은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일본 역사의 피해자”이며, 국민기금이 “국가의 책임과 국민의 책임을 고의로 혼동하고 있다”며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말한다. 하느님께서 자신의 모상으로 만든 인간의 존엄은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며 진정한 국가보상을 촉구한다.

일본 가톨릭 주교단과 정평협은 무라야마 담화가 발표되기 전 2월 25일에 「평화에의 결의 전후 50년을 맞으며」<sup>67)</sup>를 발표하였다. 이 성명서는 먼저 전쟁에 반대하는 여섯 가지 이유를 말한 후, 전쟁이 없는 ‘내일을 살아가기 위해서 과거를 돌아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일본인들의 가까이에서 살고 있는 재일코리안과 이전 ‘종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지금도 고통과 분노와 슬픔의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이 바로 일본이 제2차 세계 대전의 가해자라는 증거라고 말한다. 정평협은 같은 날 발표한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전후 50년을 맞으며」<sup>68)</sup>에서 일본 가톨릭의 전쟁책임에 대해 언급하면서 “대동아공영권 건설 및 아시아의 해방이라는 명목 하에……2천만 이상의 형제자매를 살해하고 노동과 성노예로 강제 연행하였다”라고 언급한다. 주교협의회에서 ‘종군위안부’라고 표현했던 것에서 나아가 정평협은 ‘성노예’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다. 정평협은 또한 과거 일본군 ‘위안부’는 지금 일본인들에 의해서 아시아 각국에서 자행되는 ‘성적 착취와 연속선상’에 있다고 말한다. 끝으로 전후 보상문제의 시급성을 지적하면서 일본정부는 전후 보상은 국가 간에 끝난 이야기라고 보고 개인보상도 사죄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종군위안부’에 대해서는 민간기금

67) 日本カトリック司教団, 「平和への決意 戦後50年にあたって」1995.2.25.  
<https://www.jccjp.org/archives/info/1326.html>

68) 日本カトリック正義と平和協議会, 「新しい出発のために 戦後50年にあたって」1995.4.16.  
<https://www.jccjp.org/archives/info/1327.html>

에 의한 위로금 구상으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한다며 이러한 속임수를 용서하지 말고 전후 보상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로부터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에서 일본에 의한 징용 피해에 대해 일본 기업에게 위자료를 지불하라고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함께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이미 소멸되었다고 반발하며 사법에서 판결한 ‘한국정부에 대한 무작위’ 책임은 국제법과 국제조약 원칙에 위반되는 언어도단 행위라고 비난하였다. 이 판결과 일본정부의 비난으로 한일관계가 차갑게 식으면서 지금까지 회복의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 전개에 대한 우려 속에서<sup>69)</sup> 정평협은 2019년 8월 15일 한일정부관계의 화해를 위한 회장 담화를 발표하였다<sup>70)</sup>. 이 담화에서는 한일 간 갈등으로 인하여 “일본에서 ‘중군위안부’를 상징으로 하는 ‘평화의 소녀상’ 공립미술관 전시”가 정치가들의 혐오 발언으로 중지되었을 뿐 아니라 다양한 한일교류 행사 중지로 시민들 사이에 생겨나는 균열에 대하여 염려한다. 그리고 이 담화는 무엇보다도 3.1운동 독립선언문을 높게 평가하며 다음과 같이 식민지 지배 책임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69)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7일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 본체철과 닛산화학,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법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13718)에서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쟁점은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이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서울 중앙지법 민사 34부 판결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하였다는 점에서 극명하게 갈린다. 이처럼 한국 법원 내에서도 개인청구권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가운데, 일본 가톨릭교회는 개인배상은 별도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표명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70) 日本カトリック正義と平和協議会会長談話, 「3·1獨立運動100周年を迎えて」 2019.3.1

이 독립선언서는 일본을 비난 단죄하는 것만이 아니라 차별과 민족의 자기결정권을 빼앗는 식민주주의의 극복이라고 하는 보다 숭고한 인류보편의 이상실현에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 조선인만이 아니라 100년 후 현재를 살아가는 세계의 모든 사람이 기억하고 상기할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일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 2020년 6월에는 일본가톨릭 주교단의 「전후 75주년 평화 메시지」<sup>71)</sup>도 나왔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상당히 유의미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바로 2020년 12월 「여성국제전법 법정 20주년을 맞으며 정부에 대한 요망」이다. 이 메시지는 2000년에 일본에서 개최되었던 ‘여성국제전법법정(2000년 법정)’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sup>72)</sup>. 2000년 법정은 1998년 아시아위안부연대회의 제5회 회의 석상에서 일본 참가단체인 ‘여성과 전쟁에 대한 폭력 일본네트워크(VAWW-NET 재팬, 현 VAWW-RAC)가 국제 민간법정 개최를 제안하면서 ‘가해국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었다.

이 요망서는 당일 법정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법정에는 피해자 64명을 포함하여 해외에서 400명이 참가하였다. 4일 동안 하루 1000명 이상 합계 5000명 이상이 방청하였으며, 2001년 12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최종 판결이 있었다. 판결내용은 ‘위안부’제도는 인도에 반하는 죄이며 ‘본질적으로 국가가 인정한 강간과 노예화’이며, 쇼와일왕과 9명의 일본군 관계자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패전 후 일왕 면책을 위하여 노력한 일본정부와 냉전 대응 필요에 따른 필요성에 의하여 미국은 일본 왕의 전쟁책임을 묻지 않았다. 따라서 이 법정이 지니는 의미는

71) 日本カトリック司教団, 「戦後75年司教団メッセージ すべてのいのちを守るため—平和は希望の道のり—」, 『カトリック新聞』 2020.6.28.

72) 日本カトリック正義と平和協議会会長 勝谷太治, 「女性国際戦犯法廷20周年にあたっての政府への要望」 2020.12.12.

[https://www.cbcj.catholic.jp/2021/01/07/21911/\(검색일 20211230\)](https://www.cbcj.catholic.jp/2021/01/07/21911/(검색일 20211230))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정부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으며, 관계 자료의 보존과 공개, 교과서 기술, 젠더교육 실시 등의 권고가 함께 이루어졌다. 이 법정은 나아가 과거 유엔에 대해서도 ‘위안부’ 제도의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도쿄재판에서 처벌 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것은 젠더 편향이라며, 전후 조사와 소추를 하지 않은 잘못을 인정할 것을 권유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분쟁 지역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은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이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처벌되지 않고 재판의 대상조차 되지 않은 것과 동일 선상에 있다고 국제법의 젠더 불감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이 성명서는 <보충 사항>을 두고 2000년 법정으로부터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전시 하에서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성폭력이 처벌받지 않아서 미투운동”이 일어나고, “가톨릭 교회 내의 성직자 성폭력이 있었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은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처벌되지 않은 것과 동일 선상에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일본가톨릭 교회가 2000년 법정 개최를 위하여 기울인 노력과 그 배경에 가톨릭 신자 다카자키 다쓰에(高嶋たつ江)의 공헌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지면을 상당 부분 할애하고 있다<sup>73)</sup>.

따라서 일본의 정평협은 아직도 실현되지 않은 젠더 정의를 위하여 자신들은 “다시 한번 여성국제전범법정의 결론을 사회와 일본정부에게 호

73) 성명서는 여성국제 전범 법정과 일본가톨릭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하고 있다. “다카자키 다쓰에는 가톨릭도쿄교구 정의와 평화위원회 멤버이며, 여성국제전범법정 국제실행위원회 공동대표 3인의 한 사람이었으며, VAWW-NET 재판의 초대사무국장이었다. 여성국제전범법정은 1인당 2000엔씩 1만명을 모집하는 풀뿌리캠페인으로 실현되었다. 기금찬동단체는 298곳이었는데 그 중 89개의 가톨릭 관련단체(일본가톨릭 정의와 평화협의회 외 수도회, 수도회공동체, 소교구 등)가 참여하였다. 또한 법정개최의 주역인 VAWW-NET재판 사무국이 도쿄도 고토구 시오미東京都江東区潮見의 일본가톨릭회관 내에 있어서 가톨릭 수녀들이 개최사무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 또한 마쓰이 야요리(松井やより; 1934~2002)는 VAWW-NET재판 대표였으며 여성국제전범법정 개최를 이끌어 낸 주역이었다. 그의 뜻을 잇고 있는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자료관(wam)에 가톨릭 국제적 평화단체인 파스크리스티는 2007년 평화상을 수여하였다.”(「女性國際戰犯法廷20周年にあたっての政府への要望」2020.12.12.).

소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 성명서를 낸다고 말한다. 그리고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해결은 고사하고 이 문제를 건드리는 것조차 일한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처럼” 생각하는 일본 사회 일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본질적으로 국가가 인정한 강간과 노예화’라는 것을 인정할 것  
일한합동선언에는 피해당사자의 목소리가 없습니다. 피해자와 직접 마주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형태로 사죄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형태로 배상 할 것  
‘위안부’제도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일본군‘위안부’제도를 역사 속에 위치시켜 기억을 계승하기 위하여 진력할 것  
‘평화의 소녀상’의 철거를 위하여 타국과 그 자치단체에 개입하지 않을 것<sup>74)</sup>

이 성명서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한 2015년 12월 한일외상회담과 한일공동성명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대신이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은 ‘적절하게 이전되어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이 회담으로 위안부문제에 ‘중지부를 찍었다’라는 주장에 대한 일본교회의 입장 표명이라고 할 수 있다.<sup>75)</sup>

---

74) 「女性国際戦犯法廷20周年にあたっての政府への要望」 2020.12.12

75) 日本カトリック司教協議会社会司教委員会, 『なぜ教会は社会問題にかかわるのか Q&A』, カトリック中央協議会. 2012.2.15.

#### IV. 결론

일본 교회의 전후 역사인식에 대해서 정평협이 낸 성명서를 네 가지 역사적 사안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일본 교회의 과거사에 대한 인식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 것 같다. 일본가톨릭주교협회의 사회사목위원회가 발행한『왜 교회는 사회문제에 관계하는가 Q&A』는 모두 33개의 문항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그 중 본 논문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문항은 18번 문항과 22번 문항이다. 18번 문항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과거를 뒤돌아보는 것은 미래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를 주교단은 어떻게 받아드리고 실천으로 연결했는가? 그리고 현재 주교단의 ‘과거를 뒤돌아보는 것’이 시종 자학사관이 되어버린 것 같다는 질문이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교회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과거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들 신앙을 강하게 하는 용기 있는 성실한 행위입니다”라는 언명을 우선 인용한다. 그리고 “너무도 어려운 일이지만, 우선 과거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하고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는 것으로 과거의 죄가 현재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과 마주하고 과거를 새로운 눈으로 보아, 기억을 씻어내고 화해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자학사관은 전쟁 사실과 전쟁범죄를 왜곡 부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언하였다고 할 수 있다.

22번 문항은 주교단은 “비폭력을 관철하여 평화를 이룬다”라고 호소하면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테러리스트 안중근 사후 100주년기념 미사에 두 명의 주교가 참가한 것에 대해 묻는다. 이 질문은 일본 사회에서 역사가 어떠한 맥락에 놓여있는지 보여주며 이에 대한 답은 일본가톨릭의 역사인식이라고 볼 수도 있다.

22번 문항에서 말하는 2010년 다롄에서 열린 “안중근의사 순국 100주년 추모식과 동양 평화 기원 미사”는 앞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시라야나기 세이치 추기경과 신학생이었던 김동원신부의 만남이 세월이 흘러 맺은 결실이었다. 김동원 신부가 주목했던 것은 안중근의 ‘동양평화’였으며, 한중일 삼국의 사제와 교인들이 함께 모여 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연대의 가능성을 열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2번 문항에서 알 수 있듯이 ‘테러리스트’ 안중근과 ‘의사’ 안중근이라는 국가 간 인식의 차이가 있고 이것이 일본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문항을 만들어 답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문항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끝을 맺는다.

우리들은 안중근에 대해서 평가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병합’ 100년이라고 하는 기회에 공통의 역사인식을 갖기 위하여 모여서 한국, 중국의 교회 멤버와 다양한 입장의 사람들과 함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대화와 화해를 진척시키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sup>76)</sup>

또한 안중근 의사의 의거에 대해 “일본의 침략에 대한 정당방위이었다”는 공통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77)</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회의 역사인식의 ‘보수성’은 여전히 많은 내용을 낳고 있는 것 같으며 일본 교회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리스도교도의 공동체인 교회는 태초부터 사회 속에서 사회와 함께 사회를 위하여 살아왔다...하느님의 사랑과 구원의 힘을 사람들에게 전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그리스도교도는 사람들과 사회가 내면에서 변할 수 있도록 일하

76) 日本カトリック司教協議会社会司教委員会, 『なぜ教会は社会問題にかかわるのか Q&A』, カトリック中央協議会, 2012.2. 15, 79쪽.

77)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는 「가. 정당방위」에서 “침략을 받은 국가 지도자들은 무력을 사용해 서라도 방어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말한다(『간추린 사회교리』,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6.9.29., 371쪽).

는 사명을 부여 받았습니다.<sup>78)</sup>

일본교회는 일본 사회가 내면에서 변할 수 있도록 사회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주변 아시아 국가들과의 연대와 화해, 평화를 위한 기초적 작업이 되는 역사문제를 바르게 인식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평화를 현실세계에서 이루어내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간주하며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다.

투고일: 2022. 10. 20. 심사 시작일: 11. 25. 심사 완료일: 12. 19.

---

78) 日本カトリック司教協議会社会司教委員会, 앞의 책, 3쪽.

참고 문헌

- 고노이 다카시(이원순역), 『일본 그리스도교사』, 한국교회사연구소, 2008
- 고야스 노부쿠니(김석근역), 『야스쿠니의 일본 일본의 야스쿠니』, 산해, 2005
- 교황청 정의 평화평의회, 『간추린 사회교리』,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6.9.29.
- 서경식·타카하시 테츠야, 『전쟁의 기억을 둘러싼 대화 단절의 세기 증언의 시  
대』, 삼인, 2002
- 신명직, 「재일 코리안과 다국가 시민권」, 『석당 논총 56』, 2013.7
- 일본 가톨릭 중앙협의회 복음 선교 연구실편(이종승외 역), 『역사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전시, 일본 가톨릭 교회의 입장과 신사 참배』,  
가톨릭 출판사, 2000
- 아카자와 시로(박화리역), 『야스쿠니신사』, 소명출판, 2008
- 우에노 지즈코(이선이역), 「국민기금의 역사적 평가를 위하여」,  
『위안부를 둘러싼 기억의 정치학』, 현실문화, 2014
- 유가별, 「교황청의 신사참배 허용의 최후 과정」, 『교회사연구 56』, 2020
- 이영채, 「전후 일본의 시민운동과 한일 시민연대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를 넘어서」, 『황해문화』 48, 2005, 9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2010(1969)
-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로: 한일주교교류 모임 자료집  
(1996~2001)』,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2
- 최영균, 「한일주교교류의 성과와 전망: '연대' 신학의 증범위 이론을 위하여」,  
『동아시아 복음화연구원 제5회 학술 심포지엄 자료집  
동아시아 사회와 가톨릭교회』, 2017.5. 20

인터뷰이 김동원 신부 (2021년 12월 2일 10시~12시/2022년 5월 24일 16시  
~18시, 인터뷰어 이선이)

朝比奈 正幸, 『新編 国民日本史』, 原書房, 1987.

西尾 幹二, 『新しい歴史教科書-市販本』, 扶桑社, 2001.

三好千春, 「日本カトリック教会の歴史認識-記憶の連帯を目指して」,  
『신학과 철학』 36, 2020.6.5

光延一郎, 「東北アジアの和解と日韓カトリック教会の役割」,  
『신학과 철학』 36, 2020.6.5.

屋敷一葉, 『「正平協」の切り開いた道—1970年代韓国民主化闘争支援活動を  
通して』, 同志社大学修士論文, 2018

カトリック司教協議会, 『平和と現代の日本カトリック教会教皇「平和アピ  
ール」に答えて』, カトリック司教協議会, 1981.10.20.

日本カトリック司教協議会社会司教委員会, 『なぜ教会は社会問題にかか  
わるのか Q&A』, カトリック中央協議会, 2012.2.15.

辛珠栢, 「韓日歴史教科書問題の史的展開(1945~現在):  
1981年と2001年の展開様相を中心に」,  
『第二部 制度・変遷 教科書編纂制度の変遷・教科書問題の史的変遷』,  
日韓歴史共同研究委員会, 2010.3

日本基督教団総会, 「第二次大戦下における日本基督教団の責任についての  
告白(Confession on the Responsibility during WWII)」,  
<https://uccj.org/confession>

関東教区, 「日本基督教団罪責告白」,  
<http://uccjkanto.holy.jp/syo/zaiseki.html>

関東教区, 「日本基督教団罪責告白」Q&A,  
<http://uccjkanto.holy.jp/syo/zaisekiqa.html>

[https://www.vatican.va/news\\_services/press/documentazione/documents/  
cardinali\\_biografie/cardinali\\_bio\\_shirayanagi\\_ps\\_en.html](https://www.vatican.va/news_services/press/documentazione/documents/cardinali_biografie/cardinali_bio_shirayanagi_ps_en.html)

- 教皇ヨハネ・パウロ二世, 「広島『平和アピール』」, 1981.2.25.
- 日本カトリック正義と平和協議会 [https://www.jccjp.org/?post\\_type=info](https://www.jccjp.org/?post_type=info)
- 日本司教団・正義と平和委員会, 「現代に平和を」, 1970.1.1.
- 「(東京教区)靖国神社国家管理の立法化に反対」, 1973.10. 28
- 「靖国神社国家管理の立法化に反対」, 1973.10.28.
- 日本カトリック正義と平和協議会, 「韓国の人権侵害に憂慮」,  
1974年7月12日
- 日本カトリック正義と平和協議会 担当司教 相馬信夫・会長 森田宗一,  
「要請文 金大中氏事件に関連して」, 1979.6.29.
- 「教科書問題についての声明」, 1982.7.30.
- 「建議書 外登法, 指紋押捺」, 1984.2.28.
- 「意見書 外国人登録法快晴指紋押捺制度反対」, 1985.7.16.
- 「要望書 指紋押捺問題」, 1985.9.7.
- 「要望書 外登法問題に関する」, 1986.2.19.
- 「ミサ説教(日本語)第4回FABC」, 1986.9.21.
- 「要望書 元‘従軍慰安婦’補償問題」, 1994.12.29.
- 「平和への決意 戦後50年にあたって」, 1995.2.25
- 「教科書検定合格に関する憂慮表明」, 2001.5.7.
- 「総理大臣の靖国神社参拝に対する反対表明」, 2001.6.29.
- 「『新し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会』の教科書の不採択のお願い」, 2005.8.8.
- 「3・1独立運動100周年を迎えて」, 2019.3.1
- 「声明文 女性国際戦犯法廷20周年にあたっての政府への要望」,  
2020.12.12.
- 日本カトリック司教団, 「戦後75年 日本カトリック司教団平和メッセージ」,  
『日本カトリック新聞』, 2020.6.28.
- 「『靖国法案』に反対 司教団はじめて共同声明」,  
『東京教区ニュース第35号』, 1980.11.1.

<https://tokyo.catholic.jp/info/news/10950/>

<https://www.rekishidb.meijijingu.or.jp/glossary/detail.php?id=136>

「POPULORUM PROGRESSIO: ENCYCLICAL OF POPE PAUL VI ON  
THE DEVELOPMENT OF PEOPLES」

[https://www.vatican.va/content/paul-vi/en/encyclicals/documents/  
hf\\_p-vi\\_enc\\_26031967\\_populorum.htm](https://www.vatican.va/content/paul-vi/en/encyclicals/documents/hf_p-vi_enc_26031967_populorum.htm)

<https://kaze-yashiro.com/shinto-directive/trackback/>

ABSTRACT

Awareness of Postwar History of the Catholic Church in Japan:  
Focusing on the Message of the Council for Justice and Peace

LEE, SUNYI

Kyunghee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statement issued by the Justice and Peace Council on the postwar historical perception of the Japanese church by dividing it into four historical issues. First, the issue of history textbooks, second, the alien registration law and fingerprinting, third, the Yasukuni Shrine issue, and fourth,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The Justice and Peace Council is concerned that Japan’s right-wing, right-handed history textbooks are far from the common understanding of history in East Asia and do not teach the issues young people must know in order to relate to Asian people. In addition, the church expressed its position on the issue of fingerprinting in Japan from the standpoint of the church that no human should be discriminated against because all human beings are equal and precious as children of God. He criticizes that the Japanese prime minister’s official visit to Yasukuni Shrine, which was “the spiritual pillar of militarism during the wartime emperor,” is “affirming the war 60 years ago” and glorifying dying “for the sake of the country.” Finally, he commented on the position of recognizing that the “comfort women” system of the Japanese military was “essentially state-recognized rape and enslavement.” This positional statement says that all Christians are given a

mission to work so that people and society can change from within.

Key words:

Japanese Catholic Church, Japanese Catholic Justice and Peace Council, Responsibility for War, Recognition of History, History Textbook, Fingerprint System, Alien Registration Law, Yasukuni Shrin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